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2017



대한상공회의소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 제언을 드리며

나라 살림살이가 번창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와 시대정신 등 기업과 관계된 전반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는 단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운영의 비전을 수립하시기 전, 경제계의 절박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공약에 반영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경제계 제언을 올립니다.

경제계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립니다.

“오스트랄로‘스펙’쿠스를 아십니까? 열심히 스펙 만들었는데 외면당하는 현실이 우울해요. 우리에게도 땀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주세요.”

**취업준비생**

“대기업 노조파업은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대로 밥벌이 할 수 있게만...”

**비정규직**

“쌀가게에서 세계적 자동차 회사 일군 정주영 신화는 옛 이야기가 되는 듯합니다. 포화상태인 시장, 질게 깔린 불확실성, 계단을 오를 때마다 턱턱 막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기업 A**

“관공서 다니다 보면 ‘단 1밀리미터의 미래’도 못 내다보는 듯한 공무원 분들 아직 계세요. 기업에게는 규제보다 더 큰 애로로 작용합니다.”

**기업 B**

“벤처기술을 대학생이 만든 앱(app) 정도로 생각해요. 좋은 기술에 좋은 대가를 지불하는 시장이 없어 창업 제2라운드 정말 어둡습니다.”

**기업 C**

## **‘노오력’이라고들 합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이라는 벽,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더 깊어지는 갈등의 골……  
‘맨손이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격언이 옛말로 되면서  
한국경제의 희망 또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라 합니다.

##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싹터야 합니다.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하는 데에서만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기업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는 우리 정치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하지만 제 때 변하지 못하면 0%대 성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 **미래비전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만 부각시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담은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서한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1. 경제계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을 만나 소통하면서 희망공식의 첫 번째는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에 안주하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기득권추구사회(rent-seeking society)論입니다. 자격증·인허가·집단의 완력으로 특권이 유지돼 합리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산업구조, 정규직·기성세대 기득권에 막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계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 경제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이 기업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인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불투명한 경영관행과 불공정거래, 종업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의식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업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같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율적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줄 아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장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 시장-정부의 조화로운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던 경제학자 케인즈(J.M Keynes)는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헌법 제119조가 이르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꽃피우고(제1항), 정부는 공정한 환경이라는 틀을 만들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제2항). 그간 우리는 제2항에 입각한 해결책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 모든 노력이 ‘제1항’이란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개개인의 모든 경제행위를 통제할 수도,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의 일탈을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외적 시장개입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판 겸 후원자 역할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경제계도 ‘이러이러한 걸 베풀어 주세요’라는 수혜성 건의는 지양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해 보시지요’라고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피드백을 받으며 새로운 성장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정부도 수립한 정책에 대해 기업과 협업하고, 기업 피드백을 받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팀플레이를 펼친다면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3. 정책의 일관성은 꼭 유지돼야 합니다.

독일 슈뢰더 前총리의 ‘인기 없는 성공’을 아십니까?

슈뢰더 총리는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극심한 실업과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하르츠 개혁’이란 이름으로 지지층인 노조에 메스를 댔습니다. 실업급여를 줄이고 정규직 권리를 줄이자 지지세력 반발은 거세졌고, 결국 개혁 3년 만에 총리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슈뢰더의 일관된 개혁 덕에 독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금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정부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름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용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재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새 정부가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어젠다를 선정해서 제시하고, 단기이슈에 매몰됨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이행상황을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 4.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 3가지 틀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경제 미래를 위한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념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름대로 국가사회를 위해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정사회의 틀을 고민하고 공유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정사회의 밑바탕인 신뢰와 팀워크를 재구축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등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경제의 틀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미래번영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틀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총격예의 선제적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 경제계는 제 45대 대통령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17만 상공인들은 새 정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열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신원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노영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형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김호남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윤광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형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이상호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용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박용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최상곤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이근찬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정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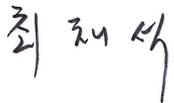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무연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최주운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최채석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장동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장동문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기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설영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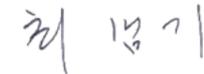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서재열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최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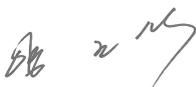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최범기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하종갑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양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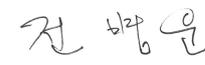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김남준



광명상공회의소  
회장 박문영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전병운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해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박인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성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수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명제태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이종범



삼척상공회의소  
회장 하은수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성덕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정창현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이범주

이범주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욱

김종욱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이경원

이경원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세영

김세영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계백

하계백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류진수

류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선

최병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용하

박용하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은호

김은호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열

송재열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근

이상근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이홍원

이홍원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김동수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효수

김효수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송화선

송화선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이의열

이의열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정기현

정기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현석

이현석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김적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호

김정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류한규

류한규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정하록

정하록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웅

구자웅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원경희

원경희

# 경제 재도약의 3대 틀

-  **01** 공정사회의 틀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  **02** 시장경제의 틀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  **03** 미래번영의 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

##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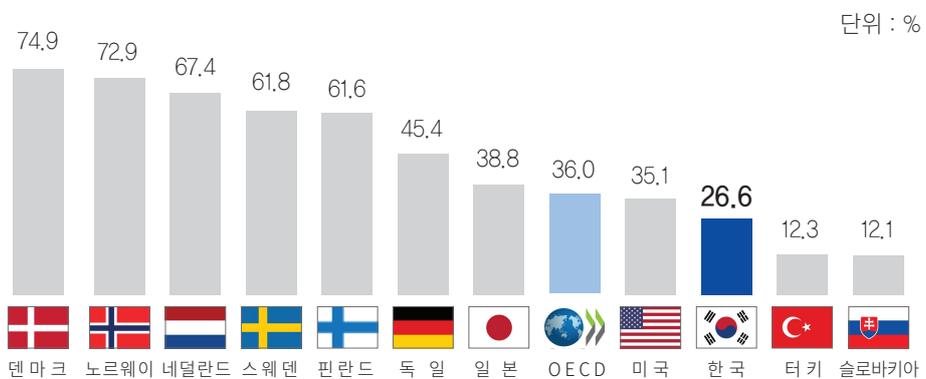
## 한국경제는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인의 73%가 ‘믿을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은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이고(한국인 79%),  
 원칙대로 살면 손해(72%)라고 인식됩니다.

서로 불신하며 합리성을 도외시한 채 자기 몫만 챙기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하다 보니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일일이 규제합니다.  
 기업은 실적이 우선이고 규범은 뒷전입니다.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입니다.  
 정치권은 대립프레임 속에 오늘도 공전 중입니다.

### 사회신뢰지수 국제비교



자료 : OECD

## 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대 성장합니다.

경제자본(노동, 자본)만으로는 저성장함정 극복도, 선진국 실현도 어렵습니다.

2단계 성장엔진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뢰, 팀워크, 사기(morale) 같은 사회자본입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북유럽 국가수준으로 향상되면

현재 2%대인 성장궤도에서 4%대(1.5%포인트 추가 상승)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信성장경로

---

공정성 확립 → 신뢰자본 확충, 규제감소 → 기업가정신 발휘·투자증가 → 경제성장



기업

법보다 엄격한 선진규범을 마련해 준수



노조

노사의 공존공영 지향



정부

시장경제원칙 확립 및 규제틀 개혁



국회

국가발전을 최고가치 삼아 여야협력

---

## 합리적 비전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업부터 바꿀 것은 바뀌어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물론 스스로 자율적 모범규준을 솔선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경쟁업체와 협력업체, 주주와 소비자와 근로자, 정부와 국회 등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시대적 관행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단호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비전의 제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올바른 비전에 기반합니다.  
사회적 분노를 추종하는 인기영합주의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신뢰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개혁은 누군가의 기득권을 포기시켜야 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정치리더들께서는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팀플레이 할 수 있는 비전과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의 틀 재정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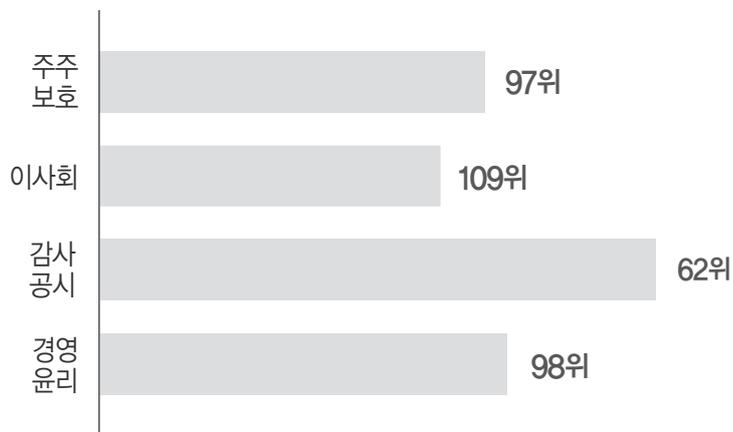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경영윤리 세계 98위, 주주보호 97위... 한국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제기관들은 한국기업의 경영관행을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경영하거나, ‘까라면 까라’ 식의 기업문화, 분식회계, 편법상속,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자금출연 사례 등이 반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구시대적 경영관행은 경제계 차원에서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불공정 플레이로 특정기업이 이득을 취하면 경쟁 또는 협력관계 기업에겐 피해가 발생하며, 반기업정서가 심화돼 선량한 다수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기업의 경영관행 평가순위(138개국 비교)



자료 : WEF

## 지배구조 꼭 바뀌어야 합니다. 방법은 시장경제 안에 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경영상 편의를 위해 책임경영 원칙에 소홀해선 안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관대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압니다.

즉, 경영진 감시·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더 중요한 원칙과 가치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진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제도’ 부분에서는 더 나은 해법을 찾기 힘들며, 이제는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나침반 삼아 정도(正道)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국회 논의중인 상법개정안

구분	개정안 내용	우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소액주주 권리강화 대신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력만 강화 가능성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출시 1주 1표가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자본 다수결 원칙 위배,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 위험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찬반투표 가능	해킹, 악성루머 등에 의해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
자사주 처분 제한	인적 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	지주사 전환 어려워짐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부실경영에 대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 훼손
특정 사외이사 선임강제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근로자 대표)이 추천하는 1인을 사외이사로 의무선임	주주재산권 침해. 장기적 관점의 사업결정 추진 어려움

##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중시해야 합니다.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 활성화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 중인 스투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지난해 말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견제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행동강령입니다.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민간의 기관투자가까지 참여해 자본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경영진 감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 분식회계, 불법출연 등 발생시 기관투자가가 안건찬성 사외이사를 고소/고발  
→ 이사회 독립성 강화효과

경제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를 전파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변신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시대적 경영관행에 대한 점검 및 차단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특히 부당한 외압에 대한 방어장치(일정금액 이상 출연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 등)도 마련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 7대 원칙

- 1 고객 자산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
- 2 책임 이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절차·방법 관련 지침 마련
- 5 의결권 정책 공개 및 의결권 행사의 내용 및 사유 공개
- 6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 보고
- 7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제공

## 기업과 사회가 함께 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사회는 기업을 불신하고, 기업은 규제 때문에 불안해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65% 할증과세),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불허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은 계열사간 지분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한 요인입니다.

사회와 기업이 불신과 불안 대신 윈-윈(win-win) 해법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구시대적 관행은 단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싶어합니다.

기업이 법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규범을 마련해 실천하면, 사회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계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립, 엄격한 후계자 양성, 전문경영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기업문화 선진화, 사회공헌 등 선진 경영관행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만한 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승계, 투기펀드의 M&A 위협 방어 등의 인센티브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1,963만명) 중 비정규직이 644만명이고,  
‘사실상 비정규직\*’ 까지 포함하면 900만명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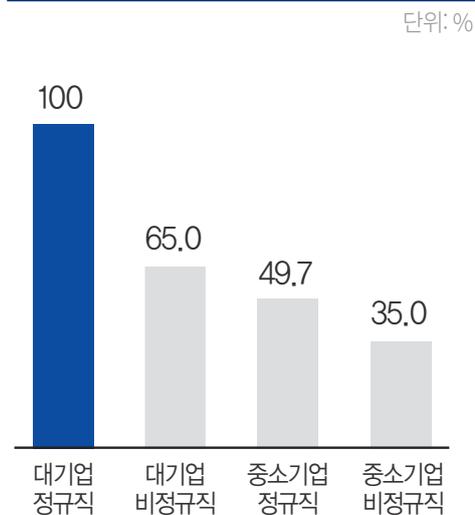
\*사내하청 등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벌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만원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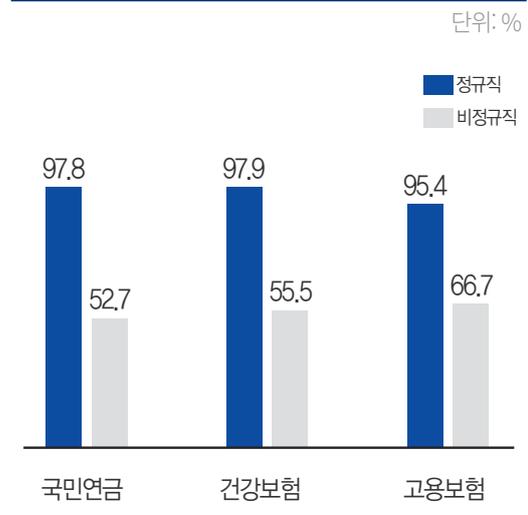
비정규직 사회보장혜택(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 임금격차('15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사회보장 격차(연금·보험 수령자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 세계 77위 노동시장 효율성으로 이종구조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세계 77위로 미국(4위), 영국(5위)은 물론 중국(39위)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강력한 근로자 보호제도를 도입했는데, 오늘날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임금인상 목적의 파업에 대항하는 일도, 성과보상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일도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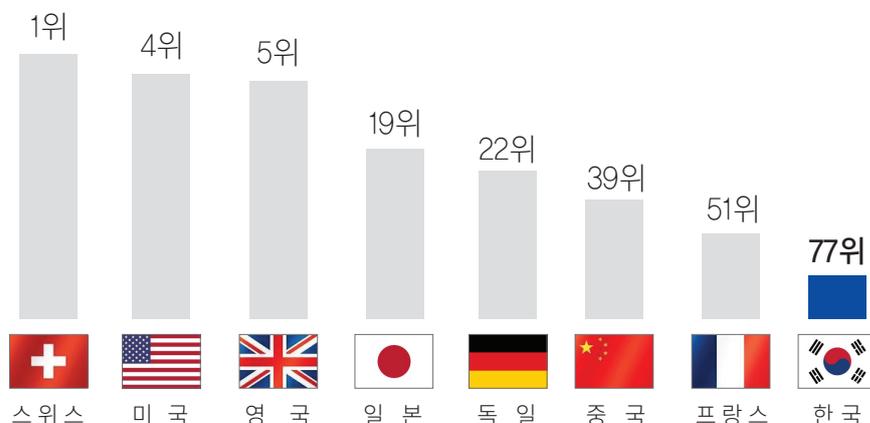
정규직에 대한 높은 보호 수준이 비정규직 확대의 한 원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안 연공급 임금상승은 계속되고,

저성장시대에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우선시 합니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를 주저하고, 설비자동화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 노동시장 효율성('16년 기준)



자료 :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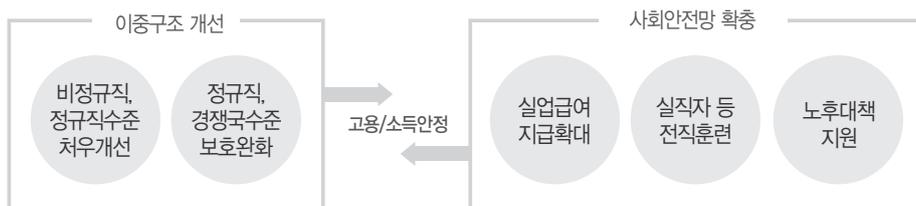
## 정규직 양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라 받는 불이익, 정규직이라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함께 조정해 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평생직업시대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못지않은 당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정규직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노사관계는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용자도 노조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울타리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정년확대(65세) 등은 청년층, 비정규직과 같이 기득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고용시장 선진화 과제





---

## 정부역할 재정립

## 독일병(病)과 슈뢰더의 ‘인기 없는 성공’을 아십니까?

슈뢰더 총리는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경제난과 실업사태 극복을 위해 노조의 기득권에 메스를 대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지세력의 반발로 자신은 재선에 실패했지만, 독일은 경제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도 장단기 대내외 리스크 극복 플랜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정부 신드롬’ 때문에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현안으로 중장기 개혁들이 매몰되지 않을까 기업들은 걱정입니다.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성장공식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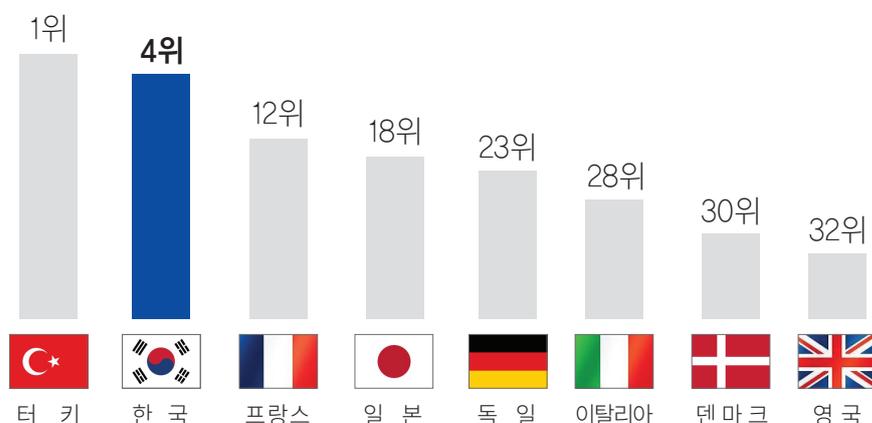
그간 정부가 어떤 산업을 키울지 정한 후 규제와 지원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면, 기업이 땀흘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압축성장을 해왔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상시화된 오늘날엔 新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기업도 정부지원만 호소하기보다 자생적 혁신에서 활로를 찾겠습니다.

규제 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OECD가 측정한 국가별 규제수준 ('13년 기준)



자료: OECD PM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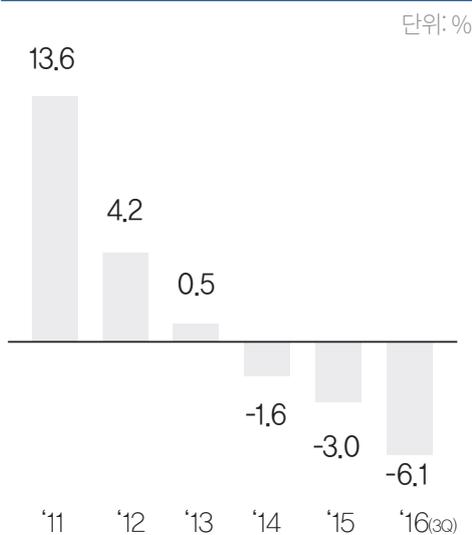
## 혁신기반 재구축

##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고들 합니다.

우리 산업은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한 속도전으로 외형상 세계 정상급에 올랐으나 이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매출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세계시장 1위 품목 수도 수 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설계능력을 키우는데 경제 재도약이 걸려 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1단계 발진(대기권까지) 후 2단계 발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에도 1단계 원동력(실행역량)에 이어 2단계 원동력, 즉 '설계역량'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전년대비)



자료: 한국은행

### 설계역량의 축적과정



단순히 무엇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디자인에서 마케팅까지 새로운 개념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것이 '설계역량'

## 정부 R&D 시스템 달라져야 합니다.

매년 20조원 들여 개발한 정부 R&D 기술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율이 32%에 그치고, 사업화되는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빨리 추진해 성과를 거둘 과제도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진행돼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집중돼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드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하지만, 제도와 인프라 미비로 출발선부터 뒤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만 해도 도로교통법 정비, 정밀지도, 지능형 통신망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진척이 늦어 경쟁국에 다소 밀리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고속 운송과 교통, 기후변화 대책, 재해관리시스템 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합니다.

## 벤처정책도 ‘start up’에서 ‘scale up’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넘어 사상최대 ‘벤처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상장이라는 출구는 13년이 걸리고, M&A 출구는 1.5%의 바늘구멍입니다.  
또,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윈윈하도록  
‘창업 및 도전 → 성공 후 자금 조기회수 → 벤처 재창업’이라는  
민간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 서비스산업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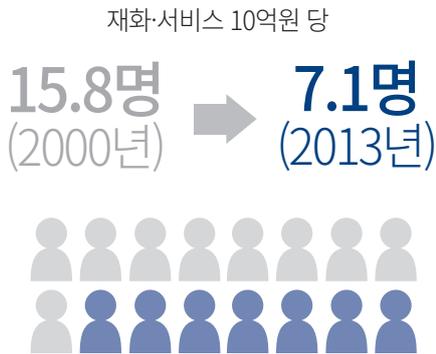
## 서비스는 ‘공짜’가 아닌 ‘일자리’입니다.

제조업이 만들어 내던 일자리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5년 전 10억 원의 재화·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제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16개 정도였다면, 오늘날엔 절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안은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아이디어, 사람 중심이어서 제조업보다 2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융복합은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기도 합니다.

IT,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은 정체됐고 일자리 비중도 낮은 반면,  
 편의점, 치킨집과 같이 누구나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인 출혈경쟁으로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제조업 고용창출력



### 서비스산업 발전시 예상 경제효과

- 서비스산업 고용창출효과 제조업의 2배 (한국은행, '13)
-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15~69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KDI, '15.4)
- 청년 10명 중 8명, 서비스분야 일자리 원해 (KDI, '15.10)

자료: 한국은행

##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법제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 규제를 풀다니까 국민들은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 기초서비스 부문이 민영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변화과정 속에서 기존에 먼저 자리잡았던 이들의 기득권에 다소 피해가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모든 것을 투망식으로 막아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큰 틀과 흐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각종 규제를 풀고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만 경쟁에서 뒤처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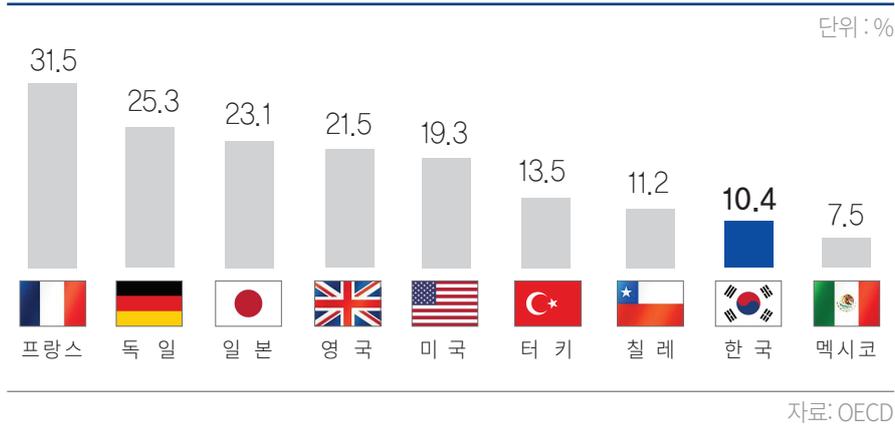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우리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은 1인당 3만 달러의 문턱에 와 있지만,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관심은 칠레, 터키 같은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노인과 육아,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의 복지수준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 GDP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16년 기준)



## 경제계가 복지 확대를 우려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달리, 경제계도 복지 확대를 환영합니다. 소득 양극화와 계층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교육과 의료 기회 제공,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경제의 흐름과 성장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내부 복지여건 강화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복지확대에는 원칙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는 오해와 이견이 존재합니다. 원칙 없는 복지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유럽의 사례처럼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확대는 큰 틀의 청사진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복지확대는 재정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규모와 속도, 자원부담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 자체의 확대만이 아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 복지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복지재원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지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부담주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합리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도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소비진작 효과 때문에 경제회복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 증세도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세수감소의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확보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혁신

## 깍두기는 2cm로 썰어야만 정답입니까?

※2016년 모 중학교 기출문제

**Q. 다음 조리법 가운데 잘못 된 것을 고르시오.**

1. 깍두기를 담글 때 무는 3cm 크기로 팔모썰기를 한다. (정답은 2cm)
2.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은 찬물에 불려 4cm 길이로 썬다.
3. 도라지 오이 생채에 들어가는 도라지는 6cm 길이로 얇게 찢어 소금을 넣고 주물러 씻는다.
4. 감자볶음을 할 때 감자는 0.5cm, 당근과 양파는 0.3cm 두께로 채썬다.

인공지능시대를 앞둔 지금도 암기 위주의 대학입시와 주입식 교육이 여전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창의적 인재를 원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열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빈약합니다.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70%로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대졸 취업률은 65%, 국가경쟁력은 33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최저 수준(36%)입니다. 일명 ‘스위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산업계 수요는 이공계 중심이지만, 대학교육은 인문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직원 1명 재교육에 18개월의 시간, 연간 6,000여 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창의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답만 강요하는 콘텐츠(Contents) 위주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콘텍스트(Context) 위주 교육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 : 새로운 사고를 요하는 논술형문제

교실 :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수업(토론·발표 등)

암기시간 ↓

창의력·  
독창력  
개발시간 ↑

유연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변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 기존의 틀을 깨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입지도 대신 진로지도를 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선택을 유도해야 합니다.

\*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진로지도가 이뤄지고 졸업생의 60%가 직업교육을 시행

산업계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공학교육도 단순 지식습득 대신

개념과 원리 이해, 응용 및 문제해결역량 등을 중시해야 합니다.



---

##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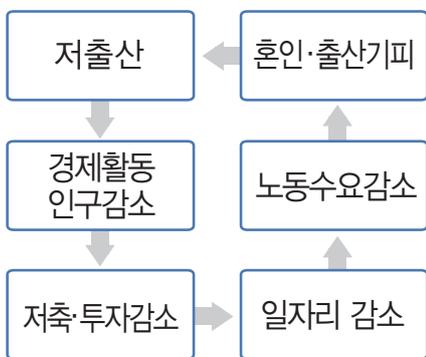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으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재앙은 이미 시작 시작됐습니다. 5년 내 경제활동인구의 20%가 한꺼번에 은퇴합니다. 100만명이 넘는 할아버지(1958년생) 세대에 비해, 손자(2018년생) 세대는 30만명 대입니다. 지금은 청장년 5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년 후면 2명당 1명 꼴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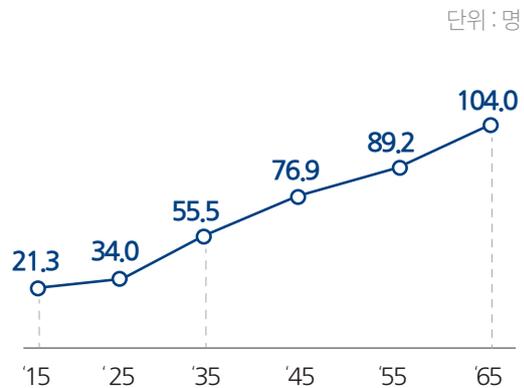
인구가 줄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를 후퇴시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인구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습니다.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험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막을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저출산의 악순환



### 청장년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



자료: 통계청

##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6년 합계출산율(1.24명) OECD 34개 국가중 33번째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양육시설을 늘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출산율을 기록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전근대적 기업문화의 선진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선진국 인구총격 대응현황

국가	정책	결과
 프랑스	<b>파격적 재정지원</b> (매년 GDP의 3~4%)	합계출산율 '94년 1.66명 → '14년 1.98명
 독일	<b>적극적 이민수용</b>	'15년 이민자 213만 7,000명 유입
 스웨덴	<b>철저한 양성평등</b>	합계출산율 '14년 1.88명, 25~54세 여성고용률 81.8%
 일본	<b>고령자 고용 확대</b>	60세~64세 고용률 62.2%

## 일할 사람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57.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성경제활동을 남성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경제가 年1%p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없애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노동관행을 정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등 EU 국가들은 동유럽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절벽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이민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우수인력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

---

경제조사본부장 이 경 상 02-6050-3441

경제정책팀장 이 종 명 02-6050-3442

경제정책팀 대리 백 지 훈 02-6050-3444





